



12일 첫 탄소 외투투자기업인 타르콤 코리아가 김제자유무역지역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첫 탄소외투기업 타르콤코리아 착공

첫 탄소 외투투자기업인 타르콤 코리아가 김제자유무역지역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과 도, 김제시는 (주)타르콤코리아와 함께 김제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이진식 김제시장, 박흥석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나병문 김제시의장, 김승학 (주)타르콤코리아 회장, 존킴 비스포스트그룹 회장, 릴리 중국 AIGO그룹회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타르콤코리아는 미국 CSI 회사와 비스포스트그룹의 탄소복합소재 융합 기술, 중국 AIGO(아이고) 자금이 투자돼 운영되는 외투기업이다.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천억 투자 내년 8월 준공 인력 100여명 채용 탄소복합 소재 파일 생산

타르콤코리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복합 소재 탄소파일을 생산하게 된다. 최근 일본, 예과도로 지진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건설, 건축분야에 강도와 내진성을 겸비한 탄소파일은 국내의 대형프로젝트사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된다. 타르콤코리아 투자는 전북탄소복합소재 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출발로 앞으로 수출생산 전진기지의 교

두보 역할로서의 의미가 깊다. 특히 타르콤코리아 투자로 새만금지역의 탄소복합소재 파일 수요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타르콤코리아는 탄소섬유, 유리섬유를 활용한 특수수지생산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자유무역지역 신축공장은 부지 18만8,000㎡(약5만7,000평)에 건축면적 2만3,000㎡(7,000평)로, 1,000억을 투자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약 1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해 내년 말 본격적인 생산 라인을 가동된다. (주)타르콤코리아의 기공식까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전북도와 김제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아래 비스포스트그룹과 접촉해 미국현지에서 양해각서 체결과 MOU체결, 외투신고, 입주승인 등을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한 탄소복합소재기업이다. 김승학 (주)타르콤코리아회장은 "김제자유무역지역의 탄소 선도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지난 5월, 10년 노력의 결실로 탄소법이 제정됐으며, 전북의 성장 동력 산업이었던 탄소산업이 마침내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로 당당히 인정받게 된 시점에, 타르콤코리아 기공식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타르콤코리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세계적인 탄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지평선산업단지에는 34개 업체가 입주하여 이중 일강, 한국구보다 등 1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로우캐빈 등 17개 업체가 공장 건설 및 준비 중에 있다. /고민형 기자, 김제=곽태기

전북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나서

현안·재난수요 집중 배정 계획...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강화

전북도가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갖추는 등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별교부세 중 시책수요를 제외한 현안수요와 재난수요가 하반기에 집중 배정될 계획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과 관련된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사업 25억과 지방도 643호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38억 원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상반기 지역현안수요로 20억 원을 비롯해 모두 223억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과 정치권에서 중앙부처에 다방면의 확보활동을 전개해나오며 따라 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히 매년도 재정부족에 대해 교부해주는 보충교부세와 달리 특별교

부세는 교부세 재원의 3%(약 1조 원) 규모로 특별한 재정부담이 있을 때에 한해 교부되는 재원이다. 실제 도로와 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지역현안사업이나 재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대상사업을 선정·배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등 간부의 계층별 접촉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 환경예측예산과장은 "연말까지 현안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을 추가 발굴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전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12일 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개월 동안 각 시·군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철질변경 등이다. /고민형 기자

또 가족을 기르는 행위나 세차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도는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통문화·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5대 문화제조업 육성 등 4가지 실천과제 제안

전북지역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산업화하는 이른바 '첨단문화제조업'을 전략 산업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전략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부와 문광부 등 10개 부처가 지난달 공동 발표한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 대응방안 일환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방향을 지역에 있는 인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하고,

그 장소에서 사거나 사용해야 상품의 가치가 배가되는 '장소기반 문화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문화제조업을 전북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제시한데 이어 4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김 박사는 첫째, 전북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과 다양한 R&D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시장 확장성이 큰 한지산업과 목공예산업, 음식산업, 보석산업, 엔터테인먼트형 6차 산업을 전북 문화제조업 육성 5대 분야로 제시했다. 둘째는 전주(한지섬유, 맞춤형가구), 익산(보석), 남원(웃칠 자동차), 순창

(우리밀청국장주키) 등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한 전북첨단문화제조업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셋째는 전통적 생산방식 이야기브, 전통문화기술 R&D, 전통문화기술 사업과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국립전통문화기술원 설립을 제안하고, 전북을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과 창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다. 넷째는 미래부가 7월부터 추진할 3대 선도프로젝트인 전통제조업 기반 고급 갈사업은 남원, 청국장 발효균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사업은 순창, 3D프린팅용 전통천연소재 개발 사업은 전

주와 익산시를 매칭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25조 이상의 전통문화산업시장을 전북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북 3대 분야인 삼라농경,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첨단문화제조업을 추가해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지금까지 지역문화산업이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수도권 중심이었다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은 지역문화산업을 전통문화기반의 지역주도 문화산업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첨단문화제조업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전략'은 정부의 문화융성 후속대책으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민 일상생활에서 향유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접목해 전통문화산업의 새로운 산업적 수요와 시장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행자부 퇴직공무원 복지상담 재능나눔

9월부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 참여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들이 오는 9월부터 읍·면·동 복지공무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퇴직공무원들은 재능나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복지허브와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행자부, 지자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상시·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플랫폼이 활용된다. 우선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읍·면·동을 정하고 재능나눔을 신청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퇴직공무원들에게는 행자부 장관이 공식 인증서를

준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이후 지자체별 수요, 퇴직공무원 경력 등을 고려한 읍·면·동과 퇴직공무원간 매칭을 통해 대상지역과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읍·면·동에 배치된 퇴직공무원은 복지허브와 연계해 이미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퇴직공무원들의 근무형태와 시간은 읍·면·동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 중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을 대상으로 퇴직공무원 100명을 시범 배치·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고려해 내년까지 3502개 전국 읍·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6-748호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정읍시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관련 입안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게재 생략
2.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정읍시청 도시과
4. 열람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가. 제출장소: 정읍시청 도시과
 -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관련 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13. 정읍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